

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www.alltogether.or.kr | atgmail@nate.com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공공연맹 결의대회 - 산별노조는 노동자 연대를 확산하고, 현장노동자의 자주적 행동을 고무하는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공공운수 통합연맹 - 투쟁의 원칙에 따른 민주적 통합이 중요하다

공공연맹과 운수분야의 택시·화물·버스연맹이 하나로 통합해 공공운수 '통합'연맹을 건설하려 한다. 이미 산별노조인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건설된 상황에서 통합연맹이 건설되면 그동안 진행된 공공운수분야의 산별노조 건설 흐름이 일단락된다. 그리고 더 커다란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더 큰 틀에서 단결하고 투쟁하려는 열망을 반영한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통합연맹 건설 과정에서 술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연말

에 있었던 사건들(택시연맹의 막판 뒤집기 제안, 통합대의원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갑갑질판, 12월 26일 통합대의원대회 무산 등)은 통합연맹 건설의 문제점들을 보여 준 것이다.

우선,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통합연맹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 통합연맹이라는 새 집을 짓는 일이 마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날림공사마냥 무리하게 추진됐다. 따라서 '상층 간부들만의 산별이고 조합원은 들러리인가'라는 비판도 나올 만 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왜 공공

운수통합연맹을 건설하는가?', '통합연맹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과제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공공·운수 분야 노동자들은 더 폭넓고 강력하게 연대해서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라며 통합연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연맹 건설 논의는 이런 내용보다는 온통 조직 형식에 맞춰져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구성문제, 산별노조 미전환노조 참관문제, 상근자 임금수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쟁만 상층 간부들 사이에 무성하다.

'운수노조로 가입한 철도노조와 아

시아나 노조의 처지가 어려우니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물론 아직 설립신고조차 내지 못한 운수노조의 처지는 딱하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운수 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통합연맹 건설의 핵심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충분히 토론되지 않는다면 지난 대의원대회 때 한 화물대의원의 질문처럼 '도대체 왜 상급단체를 두 개씩 두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많은 조합원들에게 통합연맹은 '육상육'으로 보여질 것이고 지지를 끌어내기 힘들 것

» 뒷면으로 이어짐

이다.

‘2월 달에 예정된 화물연대 투쟁에 어떻게 연대를 건설할 것인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연대 활동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 대량해고 등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등 투쟁의 당면 과제들을 논의하고 운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연맹이라는 형식만 갖춰지면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식의 ‘묻지마’ 통합 추진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현장조합원들의 주도성보다 상층 간부들의 권한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예컨대 공공노조 창립 대회 때 정의행위에 관한 규약 79조가 논란이 됐다. 79조 3항은 “교섭단 위별 정의행위 결의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으로 같음할 수 있되, 사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규약은 현장 파업을 가로막는 이종의 잠금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긴급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즉시 행동에 돌입할 경우 이에 대해 위원장이 심사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위원장이 파업을 승인하더라도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규약은 결국 공공노조의 상층 간부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다가 택시연맹에서는 비리 때문에 물러났던 강승규의 활동재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강승규는 지난 12월 22일 택시연맹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노사화합 체육대회, 도시철도노조의 비정규직 조합원의 직가입 거부 결정 등도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린 행동이다.

공공운수 통합연맹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를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이런 무원칙한 일에 침묵하며 통합이라는 형식에 목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공공과 운수 노동자들은 낱아빠진 노동운동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연맹과 산별노조를 원한다.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적 활동가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권을 옹호하고, 무원칙한 행태를 단호히 비판하면서, 진정한 연대와 투쟁을 바탕으로 한 공공운수 통합연맹과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운동과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 추진을 막아내자

지난 연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나서, 이를 둘러싸고 운동진영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세 인상과 미래 급여 인하를 통한 저소득 노동자 지원’을 주장했고, 문성현 대표도 “우리끼리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도 ‘사회연대전략’에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과 소외계층을 지원하자는 내용인 ‘사회연대전략’은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에서도 논쟁되고 있다.

예컨대 기호 1번 양경규 선본은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안 된다, 된다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기호 3번 조희주 선본은 “[사회연대전략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연대와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의 처우 개선을 낳는커녕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과 혼란만 낳을 잘못된 대안이다.

우선, 고소득 노동자가 ‘양보와 나눔’에 나서자는 주장은 노무현의 ‘정규직 양보론’과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이는 ‘부유세와 군비감축을 통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민주노동당이 제시해온 기존의 대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비정규 저소득층을 돕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실현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양보와 나눔’론은 저소득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더 나은 소득의 노동자들 탓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나은 노동자는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나눔’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당연히 보수 언론과 지배자

들은 이 틈을 비집고 온갖 이간질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자·기업주들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은 더 어려워질게 뻔하다.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가 한두 배라면 노동자와 지배자들 간의 격차는 수십 배다. 노동자들 간의 소득 격차는 단결 투쟁으로 저들의 뭇을 빼앗아 아래쪽을 끌어올려서 좁혀야지, 위쪽을 끌어내리는 ‘양보와 나눔’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동지들은 “[우리의 양보] 무기로 자본과 부유층을 압박해 소득세 누진율 강화 및 법인세·자산 과세 강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 일부의 양보에 압박을 느낄 지배자는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다. IMF 때 ‘고통분담’을 위해 노동자들이 결혼반지까지 내놓으며 ‘금 모으기’를 할 때,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에 혈안이었던 게 저들이다.

기득권 세력에게 부유세 같은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강력한 대중투쟁이다. 프랑스에서 CPE법안을 철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투쟁 덕분이었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했던 것도 1930년대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거대한 파업과 투쟁 덕분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같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투쟁이지,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끼리의 ‘양보와 나눔’이 아니다.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연대 투쟁을 가로막아온 것은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연대 투쟁 전략을 고민할 때이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주간 **〈맛불〉** 을 정기 구독 하십시오

〈맛불〉은 '다함께'가 발행하는 주간신문입니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